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 언론에서의 혐한(嫌韓) 담론의 출현 연구*

- 『문예춘추(文藝春秋)』1992년 3월호를 실마리로 -

노윤선**
ysroh1008@naver.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2.3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윤리불감증 |
| 2. 『문예춘추(文藝春秋)』속의 특집 대담기사 고찰 | 2.4 혐한 담론 출현 경위 |
| 2.1 일본군 ‘위안부’의 이슈화 | 3. 나오며 |
| 2.2 식민지배와 전쟁피해의 청산문제 | |

主題語: 혐한(Anti-Korean Sentiment), 문예춘추(Magazine Bungeishunjū), 일본군 ‘위안부’(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글로벌 시대(The Era of Globalization)

1. 들어가며

일본의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니혼케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을 일본 5대 일간신문으로 꼽는다. 여기에서 5대 신문의 선정기준은 세계신문협회(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가 2008년에 집계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일본신문들이 차지하고 있다.¹⁾ 발행부수의 수치가 클수록 그만큼 구독자의 수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구독자수가 많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여 파급력 또한 커지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 언급한 일본의 5대 신문을 이 연구의 고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본의 5대 일간신문에서 글로벌 시대²⁾ 이후 ‘혐한’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 이 연구 성과는 2017년도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2030년 글로벌 동아시아학을 선도하는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 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1) 노윤선(2016)「일본 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혐한(嫌韓) 기사 분석과 혐한의 해소방안: 혐한 최초 기사와 최근 기사를 중심으로」『日本近代學研究』제5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98-299

2)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기점을 1990년대 초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89년의 냉전체제 종식

3월 4일자 『마이니치신문』의 「[사건 직언]한일 역사인식의 차이=오가와 고타로<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私見直言』日韓の歴史認識にギャップ=小川郷太郎<駐韓日本大使館公使>)」 기사였다. 이것은 일본 5대 신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199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혐한(嫌韓)’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의 결과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국경을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를 하나로 보는 세계화·글로벌 시대가 시작된 이후 일본에서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혐한 담론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일본이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국가주의적 내셔널리즘을 지향해 가고 있는 행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1992년 3월 4일자 『마이니치신문』의 보도 이후, 나머지 일간지별로 혐한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순서를 보면, 같은 해 『아사히신문』이 4월 18일, 『요미우리신문』이 4월 22일, 『니혼게이지신문』이 6월 16일, 『산케이신문』이 10월 29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에 한국 언론 매체에서 재생되어 언급되고 있는 “혐한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산케이신문』 등의 우익 매체에 의해서다.”라는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³⁾ 왜냐하면, 이 사실은 글로벌 시대 이후에도 한국에서 그만큼 일본의 5대 일간신문에서 나타난 혐한 담론의 출현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연구해오지 않았다는 현실을 반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90년대 글로벌 시대 이후, 『아사히신문』에서는 「[세계의 논조] 중앙일보(한국) 총영사관 난입으로 일본의 혐한무드 우려」(『世界の論調』中央日報(韓国)総領事館乱入で日本の嫌韓ムード憂慮)(1992.4.18)라는 내용으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요미우리신문』에서는 「한국 드라마에서 천황 저격 장면/반발하는 우익이 재일한국공관에 난입(한일관계의)불화가 또 다시」(韓国ドラマで天皇狙撃シーン 反発の右翼が在日韓国公館に乱入 きしみ再燃)(1992.4.22), 『니혼게이지신문』에서는 「제2부 한국특집- 정치, 외무성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공로명씨에게 듣는 남북 통일환경 조성(第2部・韓国特集-政治、外務省外交安保研究院孔魯明氏に聞く、南北統一環境作り。)」(1992.6.16), 『산케이신문』에서는 「황실외교·남은 것은 한국뿐. 희미해진 거부감정, 더해가는 방문의 기미(皇室外交・残るは韓国だけ。薄れる拒否感情、熟しつつあるご訪問の幾)」(1992.10.29) 기사에서 혐한 언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의 해당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혐한을 한국이 과거에

선언과 독일 베를린장벽 붕괴, 1990~1991년의 걸프전, 1991년의 소련 소멸과 독립국가 연합 창설, 1992년의 유럽연합(EU) 조약의 조인, 같은 해 한국과 중국의 국교수립 등과 같은 정치적 글로벌화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세계를 양분해 온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장벽이 붕괴되어 세계가 자본주의 진영으로 통일되어 나온 것이다. 즉 정치적 측면에서 양분되었던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나오게 된 시점이 글로벌 시대의 기점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김채수(2012)「글로벌 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문명사적 측면을 통해」『日本近代學研究』제3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47-248)

3) 노윤선(2016) 앞의 글, p.300

집착하면서 끊임없이 사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일본의 불만 또는 악화되고 있는 대한(對韓) 감정이라고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⁴⁾ 한국이 과거에 집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인식하는 역사와 한국이 인식하는 역사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일본 혐한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정확한 역사적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그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혐한 담론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며, 일본의 혐한 현상은 정치 우경화에도 이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혐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와라기 하루미(俵木はるみ)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본 언론에 나타난 혐한 언설의 의미를 고찰했다.⁵⁾ 조관자는 한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혐한이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현상에 대해 넷우익을 중심으로 논하였다.⁶⁾ 김웅기는 재특회(在特會)의 성장과정과 성격을 정리하고, 혐한의 폭력성에 노출되고 있는 재일코리안(재일한국인 혹은 재일조선인을 의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⁷⁾ 김효진은 혐한서적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혐한을 문화이해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의미의 한국문화론이라는 흐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⁸⁾

이상과 같이 그동안 한국 국내에서는 혐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인터넷 우익, 미디어 내셔널리즘, 출판물, 재특회 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혐한 담론을 분석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90년대 글로벌 시대 이후 혐한 담론의 출현 경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검색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한·일 양국 관계를 짚어보는데 있어 글로벌 시대 이후 일본 언론에서 야기된 혐한 담론의 출현 경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문예춘추(文藝春秋)』의 혐한 관련 기사를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언론에서의 혐한 담론이 출현한 시기와 그 영향에 관해 짚어보고, 나아가 혐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4) 노윤선(2016) 앞의 글, p.302

5) 다와라기 하루미(2015)「일본 신문에 나타난 「혐한」언설의 의미 고찰-1992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50호, 한국일본근대학회, pp.113-140

6) 조관자(2016)「일본인의 혐한의식·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아세아연구』16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250-281

7) 김웅기(2014)「혐한(嫌韓)과 재일코리안-재특회(在特會)의 논리에 내포된 폭력성을 중심으로」『日本學報』제98집, 한국일본학회, pp.417-432

8) 김효진(2016)「“문화이해”와 “혐한”의 복잡한 관계: 일본 혐한서적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pp.391-399

2. 『문예춘추(文藝春秋)』 속의 특집 대담기사 고찰

2.1 일본군 ‘위안부’의 이슈화

앞서 언급한 일본 5대 신문지상에 글로벌 시대 이후 처음 등장한 험한 기사들보다도 더 앞선 시사 잡지가 있었는데, 일본의 최대 유력 종합월간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이다. 일본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잡지이자 최대발매 부수를 기록한 월간지이다. 1992년 2월 10일에 발매된 『문예춘추』 3월호는 한국인의 감정을 건드리는 특집대담을 게재하였다.

다나카 아키라(田中明)⁹⁾와 사토 가쓰미(佐藤勝巳)¹⁰⁾는 「사죄할수록 나빠지는 한일관계(謝罪するほど悪くなる日韓關係)」라는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이 대담기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한국의 ‘아마에(甘え)’¹¹⁾를 받아주는 구조를 조장할 뿐이다(慰安婦問題は甘えの構造を助長しただけだ)”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 1991년 8월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이후 이슈화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편함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당시 발행부수 1백만 부의 일본 최대 유력 종합월간지로 남성위주의 두터운 독자층을 갖고 있는 『문예춘추』의 대담기사는 일본인의 의식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다나카: 이번 미야자와 방한도 작년 후반부터 갑자기 이슈화되기 시작한 ‘조선인 (종군)위안부’¹²⁾의 보상 문제에 농락당해, 아무 결과도 없는 채로 끝났습니다. 양국 언론의 관심도 이 문제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결같이 ‘과거청산’과 보상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냉전 후의 한일관계라는 중요한 테마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매년 한국은 ‘사죄요구’를 하고 일본은 ‘사죄’를 반복하고 있어, 일본인의 반한과 험한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今回の宮沢訪韓も、昨年後半からにわかに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きた「朝鮮人従軍慰安婦」への補償問題に翻弄され、

9) 다쿠쇼쿠(拓殖)대학교수, 한국·조선연구자

10) 월간『현대코리아(現代コリア)』사 주간(主幹)

11) ‘아마에(甘え)’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리광’, ‘옹석’이라는 뜻이 있으나, 이러한 번역어로는 일본 험한론자들의 입장을 적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보여, 원문표기를 그대로 하였다.

12)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며, 일본군 ‘위안부’가 정확한 표현이다. “를 표시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일본군들이 ‘위안부’라고 불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학계에서 합의된 표기법이다. 또한 인용문에서는 1992년 당시 일본에서 100만부 이상을 판매한 유력 종합 월간지에 실린 일본사회 내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괄호로 해 놓은 것이다. 이 이후에 인용문에서 나오는 관련 단어 역시 이에 해당된다.

まったく何の成果もないままに終わってしまいました。両国のマスコミの関心もこの問題一点に絞られて、もっぱら「過去の清算」と補償を言い立てるばかりで、冷戦後の日韓関係といった重要なテーマは一顧だにされなかった。それどころか毎度毎度韓国の「謝罪要求」、日本の「謝罪」の繰り返しで、日本人の反韓、嫌韓が増大しただけ。…)¹³⁾

그동안 투쟁을 해온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를 응원해온 한국인들이 원하는 과거청산과 보상이란, 금전적인 보상만이 아닌 일본정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당시 책임자를 색출하고 합당한 법적책임과 보상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다. 진정성이 없는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논점을 흐리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더욱이 냉전 후 한일 관계는 매년 한국의 사죄요구와 일본의 사죄반복으로 일본인의 반한과 혐한이 증대했다는 주장은 일본 혐한론자들의 아주 솔직한 내심을 드러내고 있다.

2.2 식민지배와 전쟁피해의 청산문제

사토…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혹은 협정으로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의 현안은 모두 정리가 되었음에도 1984년 9월 6일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방일에서 히로히토 일왕의 ‘천황의 말씀’, 1990년 5월 24일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일에서 아키히토 일왕의 ‘보다 심도 있는 말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의 문제, 그리고 이번(1992년 1월 16일)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표면상으로는 한일신시대 등을 말하면서 실패는 한국 측이 항상 ‘36년간의 일제지배’를 언급하여 일본에 양보를 재촉하고, 한편 일본 측은 말해야 하는 것도 말하지 못하고 단지 사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一九六五年の日韓基本条約および協定でこれまでの歴史的な問題を含めて日韓間の懸案はすべて決着したはずなのに、八四年の全斗煥訪日では「天皇のお言葉」、九〇年の盧泰愚訪日では「より踏み込んだお言葉」、「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の問題、そして今回の宮沢訪韓では「従軍慰安婦」問題と、表向きは日韓新時代などと言いながら、實態は韓国側が常に「三十六年間の日帝支配」を持ち出して日本に譲歩を迫り、一方日本側は言うべきことも言わずにただただ謝罪を繰り返す。…)¹⁴⁾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¹⁵⁾은 한국과

13) 『文藝春秋』(1992.2.10)「謝罪」するほど悪くなる日韓関係: ‘慰安婦問題’は甘えの構造を助長しただけだ, p134

14) 『文藝春秋』(1992.2.10) 위의 글

15) 한일기본조약에 관해서는 김웅희(2016)의 논문을 통해 체결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김웅희(2016)「한일기본조약의 의의와 한계: 한일관계 50년의 성찰」『日本研

일본이 평등한 국제적인 위치에서 체결된 조약이 아니었으며,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논의가 직접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게다가 한국은 2005년에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 약 3만 6천 페이지를 완전히 공개한 것에 반해, 일본은 50년 이상 지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진정한 한일 신시대를 위해서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을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나카: …(1992년 1월 16일)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위안부’의 보상 문제라는 것은 정말 한심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원통한 생각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물건이나 돈의 외교교섭의 차원으로 끌어들여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과거의 책임도 돈으로 즉시’라는 상호 관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首腦會談の最も重要な議題が「慰安婦」の補償問題というのはまったく情けないですね。植民地支配を受けたという無念な思いは、われわれも分かります。だが、それは魂の次元の問題でしょう。それをモノとカネの外交交渉の次元に引き下ろしていいものなのでしょうか。これじゃまるで「過去の責任もカネ次第」とお互いに合っているようなものです。…)¹⁶⁾

사토: …‘일제36년’을 방패로 탁자를 두드리며 큰 소리를 내면, 일본인을 놀라게 할 수가 있고 일본인들은 바로 사과하고 양보한다는 일종의 테크닉이 한국 측 몸에 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日帝三十六年」をタテにテーブルを叩いて大声を出せば、日本人を脅かすことができる、彼らはすぐ謝って譲歩する—そういうある種のテクニックを韓国側は身につけてしまったという感じがする。…)¹⁷⁾

다나키는 한 민족에 대한 침략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가를 시인하여 영혼으로부터의 깊은 사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외교교섭의 대상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가해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마련하고 있는 태도로 보여 진다. 위 대답 내용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는 것을 일본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위 대답내용으로부터 각인시켜 주고 있다.

덧붙여 일본 혐한론자들은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 또한 식민지배한 한국에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죄를 하지 않은 나라는 세계대전에서의 승전국인 미국·영국·프랑스이며, 패전국이자 전범국가인 독일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1970년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에 있는 전쟁희생자

究論叢』제43집, 현대일본학회, pp.193-216)

16) 『文藝春秋』(1992.2.10) 앞의 글, pp.134-135

17) 『文藝春秋』(1992.2.10) 위의 글, p.135

비석 앞에서 당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독일수상은 무릎을 꿇고 사죄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란트 수상이 유대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패전국이자 전범국가인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일본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6,000명 이상을 잔인하게 인종 말살시킨 학살 사건과 1945년 종전 직전에 사할린에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그들의 추모비에 독일의 총리와 같이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다.

또한 독일은 2016년에 100여 년 전 식민지배로 통치하던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발생한 집단학살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2016년 10월에는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근무하였던 나치 친위대원 라인홀트 한닝(Reinhold Hanning, 1921년 생)을 기소하여 5년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독일은 일본과는 다르게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나라들에 대한 관계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와 독일-폴란드 간의 공동 역사교과서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2016년 가을부터 독일과 폴란드 학생들이 공동 역사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은 한일 관계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다나카. ...지금 한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만약 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발전했었을 것이라는 것까지 포함하여 일본이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발전가능성은 계량불가능하며 무한대로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측의 논리를 따르게 될 경우 일본은 무한대로 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요구로 일본의 배외주의를 자극할 뿐임에도 한국인은 이러한 것에 대해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의 한국은...자부심과 지조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얻은 상처를 오늘날과 같이 뽐내며 얘기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いま韓国が日本につきつけている要求というのは、もし仮に韓国が植民地にされなかったとしたら発展していたはずのものを日本は補償する義務があるという考えかたに基づいています。発展可能性なんて計量不能で、無限大にも設定できます。ということは韓国側の論理に拠って限り、日本は無限大に補償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まったく非現実的な要求で、相手の排外主義を刺激するだけです。ところが韓国人はそのことに気づいていないんです。昔の韓国人は…誇りがあり、志がありました。日本の植民地支配で受けた傷を、今のように得々と語るようなことはしませんでした。...)18)

18) 『文藝春秋』(1992.2.10) 앞의 글, p.135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을 식민지배하고 있던 일본의 미국에 대한 항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미국이 당시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결국에는 소련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또한 전후 일본은 1950년 6월 25일부터의 한국전쟁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남북 분단과 분단이 고정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극비리에 추진된 일본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라는 책임을 피하면서 미국의 양해 아래 재무장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⁹⁾

또한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⁰⁾ 당시 일본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일본을 도왔다(천우신조)”²¹⁾고 환호하였고,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외손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자민당 전 간사장 또한 “6·25전쟁은 일본에 도움이 됐다”²²⁾고 인정했다. 이러한 말들은 일본 정부 혹은 보수 정치가들이 역사인식을 결여한 채 이웃나라의 전쟁을 경제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토: …재일한국인의 처우문제가 대두된 1990년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일 때에도 얘기한 것입니다만, 한국 측의 주장은 오로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在日韓國人の處遇問題が浮上してきた九〇年の盧泰愚訪日の時にも言ったことですが、韓國側の議論というのはすべて六五年の條約や協定をないがしろにしたところで組み立てられているんです。…)²³⁾

일본정부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전후 문제는 마무리 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한일공동선언에서 표명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 자세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에 모순되는 행동이다. 1990년대의 일련의 담화발표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일본은 패전국이자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처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기 위해 일련의 담화발표에서 인정한 부분을 성실히 실행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19) 『MBC』(2001.6.22)「이제는 말할 수 있다- 6·25, 일본 참전의 비밀」. 이러한 일본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은 1994년 3월 15일의 『산케이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다.

20) 이미 미국 내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재무장을 불러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글이 발표된 바 있다.(Richard L-G Deverall(1951). “Are We Rebuilding Tojo’s ‘Red Army’?”. The New Leader. Harry S. Truman Library pp.2-5)

21) 『프레시안』(2010.10.29)「‘아차산의 위커’…그의 꿈은 과연 좌절되었나? -[프레시안 books] 정경모의 <시대의 불침번>」

22) 『머니투데이』(2008.9.2)「日총리 유력, 아소 다로 간사장은 누구?」

23) 『文藝春秋』(1992.2.10.) 앞의 글, p.136

사토: ...그리고 일본은 유상무상의 정부차관 5억 달러, 민간차관 3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였습니다. 이 합계 8억 달러로 ‘일제36년’의 식민지 지배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종군)위안부의 보상에 있어서도 원래는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진즉에 청구권자금을 지불했으니 까요. 이것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한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そして日本は、有償無償の政府借款五億ドル、民間借款三億ドルを韓国に提供しました。この計八億ドルをもって「日帝三十六年」の植民地支配の問題は決着しているんです。…24)…ですから、今回の従軍慰安婦の方々への補償に関しても、これは本来韓国政府が行うべき趣旨のものなんですね。日本はすでに請求権資金を払っているのですから。これを被害を受けた人々にどう配分するかは、韓国の主権に属することです。…25))

이렇게 일본 혐한론자들은 1965년의 배상금으로 일본이 한국에게 저지른 모든 침략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으며, 청구권의 외교교섭으로 일본의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침략 범죄 행위가 어찌 한 번의 외교교섭으로 면책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일본이 저지른 반역사적·반윤리적 범죄가 청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대륙침략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죄는 없었으며, 이는 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14년에 걸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식민지배와 전쟁피해 청산, 즉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자는 입장이 아니었다. 한일 재산청구권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입각해 논의되었는데, 강화조약의 근거였던 도쿄 재판에서도 식민지 피해 문제는 재판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문제 전문가인 오타 오사무(太田修) 도시사(同志社)대 교수 또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의 폭력성이 낳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다.”²⁶⁾고 밝히고 있다.

2.3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윤리불감증

다나카: ...지금 매스컴에서는 (종군)위안부의 수가 8만 명에서 20만 명이라고 가감하였으며, 그 7할이 조선인이었다는 등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정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いまマスコミでは従軍慰安婦の数は八万から二十万といい加減だし、その七割が朝鮮

24) 『文藝春秋』(1992.2.10) 앞의 글, p.136

25) 『文藝春秋』(1992.2.10) 위의 글, p.137

26) 『文藝春秋』(2015.3.8) 「<한일수교 50년 전문가 제언> ③오타 교수 “청산, 진실규명부터”」

人だったなど、どこに根據をおいているのか分からない決めつけ方をしています。…)²⁷⁾

사토: …(종군)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확실하며, 그것이 군과 밀접하고 불가분했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종군)위안부라는 것은 시베리아 출병 이후, 일본군이 만든 제도입니다. 시베리아로 나간 부대의 실제 3분의 1이 당시 러시아 여성과의 교섭으로 성병에 걸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군이 현지 여성과의 트러블 회피 목적까지 더해져 만든 것이 이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군과 관계가 없었다는 당시 일본정부의 설명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군)위안부의 대부분이 마치 조선인 여성이었다는 듯이 말하는 현재의 보도는 옳바르지 않습니다. 위안부 안에는 당연히 일본 여성도 있었으며, 조선 이외 나라의 여성도 있었습니다. 더 제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정부는 공식 태도를 정해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매스컴이 양성한 분위기에 휩쓸려, 너무 성급하게 사죄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從軍慰安婦が存在したことは確かです、あれが軍と密接不可分のものであったことも間違いない。從軍慰安婦というのは、シベリア出兵の後、日本軍がこしらえた制度です。シベリアに出た兵隊の実に三分の一くらいが、当時、ロシア女性との交渉によって性病に罹り、使いものにならなくなった。それで慌れた軍が、現地女性とのトラブル回避の目的も加えて作ったのがこの制度です。軍は無関係だったなんていう、当初の日本政府の説明はまったくナンセンスなんです。しかし、だからといって從軍慰安婦の殆んどは朝鮮人女性だったといわんばかりの現在の報道は正しくない。慰安婦のなかには当然日本女性もいたし、朝鮮以外の国の女性もいました。もっときちんと調べを尽くしてから、政府は公式の態度を決めてもよかった。マスコミの醸成したムードに押した流されて、何もすぐに謝罪する必要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²⁸⁾

사토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의 작전수행으로 인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윤리적 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혐한론자들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불가피성을 아무리 변명할지라도, 한국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모집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게다가 사토의 주장에는 군사행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전쟁의 도구로 삼아도 무방하다는 전체주의 의식이 당연시되어 존재하고 있다.

또 사토는 소수의 일본 여성도 일본군 ‘위안부’에 징발되었으니 한국에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본 여성의 징발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토의 비인도적인 태도는 군국주의적인 윤리불감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나카: …진상도 모르는 시점에서 마치 (종군)위안부가 모두 조선인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사죄다 보상이다 외치기 때문에 일본 국민은 한국의 억지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엄한과 혐한이

27) 『文藝春秋』(1992.2.10) 앞의 글, p.141

28) 『文藝春秋』(1992.2.10) 위의 글

라고 말하는 감정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真相も分からない時点で、まるで従軍慰安婦はみんな朝鮮人みたいなキャンペーンをし、謝罪だ、補償だと叫ぶから、日本の国民は韓国のごり押しだと受け止めてしまう。厭韓・嫌韓ともいえる気分というのは、どんどん大きくなってきていますよ。……)²⁹⁾

일본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규명이다. 그 동안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민간에서 여러 조사를 해왔지만 일본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물론 원폭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과거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식민지배 그 자체의 정책과 실태를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일본정부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고, 식민지배와 전쟁의 피해가 무엇인지를 일본 스스로 밝혀야 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비판해야 한다. 역사왜곡과 아픔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본래의 본질을 응시하며 아무런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쟁 없는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며 극복인 것이다.

2.4 혐한 담론 출현 경위

이상과 같이 특집기사에서 언급된 염한과 혐한은 둘 다 한국을 싫어한다는 의미로 당시 일본 일간신문보다 종합 월간지인 『문예춘추』에서 먼저 언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간지인 신문과는 다르게 월간지나 주간지는 그 성격상 하나의 문제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집중력 있게 파고들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문예춘추』는 1992년 3월호에서 한일관계에서의 사죄 문제에 대해 특집대담으로 다루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반한이라는 용어와 함께 염한과 혐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경제·사회·정치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힐난하면서 반과 혐의 감정을 분출시켜온 것이다.

더욱이 『문예춘추』는 일본의 최대 유력 종합월간지이기 때문에 국내의 일간 신문사에서도 『문예춘추』에 나오는 기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992년 2월 11일자로 국내 신문에도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 『동아일보』에서는 「정신대문제 일본지식인들 되레 한국비판. 청구권으로 일본책임 끝, 보상 한국정부서 해결할 일-월간지 문예춘

29) 『文藝春秋』(1992.2.10) 앞의 글

추 대답에서 ‘협한감정’ 드러내-」라는 기사로, 『중앙일보』에서는 「‘떼쓰는 한국’ 일본잡지도 억지: 문예춘추 3월호 특집대담 실어-‘한강의 기적’ 일본보상금 받아 이룩한 것-」이라는 기사가 실리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일본의 협한 감정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협한 담론이 출현하게 된 경위는 일본의 종합월간지에 실린 특집 기사가 한국 일간지에 실리게 되고, 이것이 다시 일본 일간지에 게재됨으로써 일본 언론에서 현재까지 반복 재생산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나오며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 협한 담론은 현재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협한 담론에 대한 일본 언론에서의 출현 경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90년대 글로벌 시대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면에 노출됨으로써 일본과 한국 언론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최대 유력 종합월간지인 『문예춘추』1992년 3월호(발매일: 1992.2.10)의 특집대담 기사가 그 도화선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간지나 월간지는 일간지에 비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취재하고 파고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92년 3월호 『문예춘추』의 기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죄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일본 지식인들의 발언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며, 나아가 한국의 정치·경제·역사 등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반(反)과 혐(嫌) 감정을 분출시키는 내용과 비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극우파적 의식구조 속의 논리는 환원주의적인 오류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진심어린 사죄를 방해하고 한일양국의 민간에 의한 선린 우호관계에 금이 가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필자는 앞으로도 본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며 협한 및 한일과 거창산의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인도적인 범죄를 종식시켜 어떤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이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으며 평등과 평화가 유지되는 지구촌을 만들어 가는 데 있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 제도로 군의 ‘위안부’ 제도만이 아니라 식민지 피해나 민족 간 혹은 민족 내부의 문제와도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필자는 앞으로 연구의 관심을 확장시켜 그 의미를 새겨갈 것이다.

【參考文獻】

- 김웅기(2014)「혐한(嫌韓)과 재일코리안-재특회(在特會)의 논리에 내포된 폭력성을 중심으로」『日本學報』제 98집, 한국일본학회, pp.417-432
- 김웅희(2016)「한일기본조약의 의의와 한계: 한일관계 50년의 성찰」『日本研究論叢』제43집, 현대일본학회, pp.193-216
- 김효진(2016)「“문화이해”와 “혐한”의 복잡한 관계: 일본 혐한서적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pp.391-399
- 노윤선(2016)「일본 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혐한(嫌韓) 기사 분석과 혐한의 해소방안: 혐한 최초 기사와 최근 기사를 중심으로」『日本近代學研究』제5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98-299, p.300, p.302
- 다와라기 하루미(2015)「일본 신문에 나타난 「혐한」언설의 의미 고찰-1992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을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50호, 한국일본근대학회, pp.113-140
- 조관자(2016)「일본인의 혐한의식·‘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아세아연구』16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250-281
- 『동아일보』(1992.2.11)「정신대문제 일본지식인들 되레 한국비판: 청구권으로 일본책임 끝나, 보상 한국정부서 해결할 일-월간지 문예춘추 대담에서 ‘혐한감정’ 드러내-」
- 『머니투데이』(2008.9.2)「日총리 유력, 아소 다로 간사장은 누구?」
- 『연합뉴스』(2015.3.8)「<한일수교 50년 전문가 제언> ③오타 교수 “청산, 진실규명부터”」
- 『MBC』(2001.6.22)「이제는 말할 수 있다- 6·25, 일본 참전의 비밀」
- 『중앙일보』(1992.2.11)「“폐쓰는 한국” 일본잡지 또 억지: 문예춘추 3월호 특집대담 실어-‘한강의 기적’ 일본보 상금 받아 이룩한 것-」
- 『프레시안』(2010.10.29)「‘아차산의 위커’...그의 꿈은 과연 좌절되었나? -[프레시안 books] 정경모의 <시대의 불침번>」
- 『朝日新聞』(1992.8.12)「日韓の相互‘嫌惡’を憂う」
- 『朝日新聞』(1992.4.18)「[世界の論調] 中央日報(韓国) 総領事館乱入で日本の嫌韓ムード憂慮」
- 『毎日新聞』(1992.3.4)「[私見直言] 日韓の歴史認識にギャップ=小川郷太郎<駐韓日本大使館公使>」
- 『日本經濟新聞』(1992.6.16)「第2部・韓国特集-政治、外務省外交安保研究院孔魯明氏に聞く、南北統一環境作り。」
- 『産経新聞』(1992.10.29)「皇室外交・残るは韓国だけ。薄れる拒否感情, 熟しつつあるご訪問の幾」
- 『文藝春秋』(1992.2.10)「「謝罪」するほど悪くなる日韓關係: ‘慰安婦問題’は甘えの構造を助長しただけだ」
- 『読売新聞』(1992.4.22)「韓国ドラマで天皇狙撃シーン 反発の右翼が在日韓国公館に乱入 きしみ再燃も」
- Richard L-G Deverall(1951). “Are We Rebuilding Tojo’s ‘Red Army’?”. The New Leader. Harry S. Truman Library pp.2-5
- 日本国立国会図書館ホームページ: <http://www.ndl.go.jp>

논문투고일 : 2017년 03월 16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5월 05일
 2차 수정일 : 2017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5월 16일

 <要旨>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 언론에서의 혐한(嫌韓) 담론의 출현 연구

- 『문예춘추(文藝春秋)』1992년 3월호를 실마리로 -

노윤선

한·일 관계에 있어 혐한 담론은 현재진행형이다. 필자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혐한 담론이 일본 언론에서 출현한 경위를 살펴보았는데, 글로벌 시대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면으로 노출된 탓에 언론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의 최대 유력 종합일간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1992년 3월호의 특집대담 기사를 혐한 담론의 도화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사는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사죄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일본 혐한론자들의 발언을 서두로 하여 한국의 정치·경제·역사 등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반(反)과 혐(嫌) 감정을 분출시키는 내용과 비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일본의 종합일간지에 실린 특집 기사가 한국 일간지에 실리게 되고, 이것이 다시 일본 일간지에 게재됨으로써 일본 언론에서 현재까지 반복 재생산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Appearanc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Anti-Korean Sentiment’ Discourse in Japanese Media

- Clues to the March Issue of “Magazine Bungeishunjū” in 1992 -

Roh, Yoon-Seon

Anti-Korean sentiment discour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s currently ongoing. Nevertheless, the process of emerging discontented discourse has not been intensively studi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mergence of anti-Korean sentiment discourse in the Japanese media, after the global era,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egan to appear in the media as a whole.

Particularly, the starting point of ‘Anti-Korean sentiment’ was the feature story of the March issue of “Magazine Bungeishunjū” in 1992, the most influential monthly magazine in Japan, which was composed of content and accusations that sparked hostility and negative feelings toward Korean society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history of Korea with the opening remarks of Japanese intellectuals who said they feel absolutely no need to “apologize” for the problem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 special article published in the Japanese general monthly magazine as mentioned above was published in the Korean daily newspaper, and this was again published in the Japanese daily newspaper.